지방행정연구 제40권 제1호(통권 144호) 2026. 3. 133~156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6.40.1.133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 탐색
: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Pilot Projects

우 양 호*
Woo, Yang-Ho

목 차

Ⅰ. 서론
Ⅱ.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개요와 이론 고찰
Ⅲ.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사례
Ⅳ.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효과성
Ⅴ.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초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의 해양과 연안을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으로 처음 접근한 마중물 성격의 정책이다. 본 연구는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향후 본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사례는 시범지역 사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이 가진 해양과 연안의 탄소저감 정책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 사례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 등에서 성과를 보여부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주제와 방식에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저감 취지와 해양환경 개선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과 지역의 낮은 참여 동기, 연안과 섬의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연계 문제, 정책인지도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 등은 우리나라 지역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논문 접수일: 2026. 1. 28. 심사기간: 2026. 1. 28. ~ 2026. 3. 16. 게재확정일: 2026. 3. 16.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적 과제로 남았다.

□ 주제어: 오션뉴딜, 탄소중립, 지역밀착, 시범사업. 정책평가, 효과성, 지방자치단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 advocated for carbon neutral conversion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promoted the regional carbon neutral Ocean New Deal project. The results of the policy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ngjin-gun, Incheon Metropolitan City has built a smart marine management system. In the island area of Ongjin-gun, drones and satellites are used to identify the source of marine debris and build a system that can predict its movement,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n optimal collection and treatment plan. It is planned to increase the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ocal coasts and seas by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marine debris and expanding recycling while als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collection system. Second, Gochang-gun promoted 'Keep Clean, Blue Harbor'. Eco-friendly energy utilization facilities such as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propulsion ships and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The policy effectivenes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in the Ocean New Deal pilot projec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support and expansion of the Ocean New Deal policy, and suggested various improvements and methods.

□ Keywords: Ocean New Deal, Carbon Neutral Conversion, Local Close, Pilot Projects, Policy Evaluation, Effectiveness, Local Government.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 연안의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지금까지 전개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연구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는 우리나라 '오션뉴딜'의 개요 및 지역 밀착형 정책추진에 대한 소개와 설명, 둘째 단계는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기준과 틀의 구축, 셋째 단계는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시범사업의 사례분석, 넷째 단계는 시범사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효과성 분석 등이다. 이러한 단계적 분석과 논의 구조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성공 방향과 과제를 학술적으로 제안하려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국 연안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 과정과 선정을 거쳐,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Ocean New Deal) 정책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였다. '오션뉴딜(Ocean New Deal)'은 해양과 연안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을 전국 연안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국적 공모를 거쳐, 우선 2개소를 선정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전략적 정책사업이었다(IPCC, 2024; 해양수산부, 2023). 또한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의 해양과 연안을 탄소 저감의 관점에서 처음 접근하기 시작한 '마중물'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의 개요 설명과 이론적 틀에서 다시 다룬다.[1)]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그런 점에서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연안의 도시, 어촌,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지역 밀착형 탄소저감 공공정책'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오션뉴딜 정책은

1) 우리나라는 이미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과 '2050 국가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범국가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 탄소배출량을 제로(0)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황이다. 2030년과 2040년에는 단계적으로 탄소배출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단위로 유엔(UN)에 국가 온실가스통계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행과정의 점검도 주기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 경제적 손해와 국제사회의 이행압력을 계속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탄소중립 약속을 지킬 수단의 하나로서 '해양과 연안'을 통한 탄소량 흡수 방안을 고안했다. 우리나라에서 오션뉴딜은 국제적 담론인 '블루뉴딜(Blue New Deal)'과도 통하는 개념이다. 즉 오션뉴딜은 연안과 바다를 통한 기후변화정책 및 탄소중립 아이디어의 하나로 정의된다.

시범사업이 거의 종료되었으나, 이를 효과성 평가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관점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실무적으로 먼저 현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탄소중립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기획했고,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성격이 강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오션뉴딜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편적 현상과 문제점은 아직 다루어보지도 못했고, 정책성과의 창출 및 확산 전략에 대한 탐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오션뉴딜의 존재와 정책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게다가 오션뉴딜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지역 해양환경 보호정책의 속성을 띄고 있어, 관련된 이해관계자도 적지 않다. 이 정책의 추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환경공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정책의 효과성 진단이나 평가가 꼭 필요함을 말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성과평가의 중요성도 높인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을 지방행정 학계와 현장에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범사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려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잠정적 효과성 평가를 해본다. 오션뉴딜은 정책 초기 단계에서 시범사업이 갖는 속성으로 보자면, 그 성과와 한계요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국가가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한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Ⅱ.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개요와 이론 고찰

1. ‘오션뉴딜’의 도입과 지방의 주도적 참여

‘오션뉴딜(Ocean New Deal)’은 2021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이에게 생소할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바다의 뉴딜 정책’으로 정의된다. 정책 이름에 굳이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존 정책방식과의 차별성 때문이다. 오션뉴딜은 과거 ‘국가 중심’의 해양환경정책과 연안정비사업의 일방향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뜻이다. 즉 ‘지방’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의

보전 및 연안환경의 회복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오션뉴딜은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가 고안한 정책으로, 전국 연안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션뉴딜은 탄소흡수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단위 환경정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24; 환경부, 2025).

오션뉴딜 정책의 목적은 이런 해양과 연안의 탄소흡수와 저감 기능을 크게 키우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등을 대비하여,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오션뉴딜 정책은 연안을 가진 지방이 해양공간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이른바 '바다와 연안에 의한 탄소흡수와 저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고안된 이 정책은 202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당초 오션뉴딜 정책의 추진방안에는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 등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말하는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의미는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하고, 정책집행은 지방정부와 지역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진 정책의 집행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기획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은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다(해양수산부, 2023; 환경부, 2025).

전국 연안의 오션뉴딜 정책의 도입과 국비예산 확보라는 큰 틀은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맡았다. 그리고 전국의 연안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시범사업부터 추진하였다. 소규모 시범사업의 성격상 지방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측면에서 지원토록 했다. 연안지역의 자연환경과 산업특성을 고려하되, 오션뉴딜을 통한 탄소저감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오션뉴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계획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로 수반되도록 했다. 또한 연안의 어민과 어촌계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정책의 현장 집행에 협력하고, 오션뉴딜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집단은 오션뉴딜 사업의 자문과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해양수산부, 2024; 환경부, 2025).[2)]

---

2) 오션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유형,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등에 집중하는 사업이다. 오션뉴딜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갯벌에 염생식물, 잘피 군락지를 조성하는 해양생태계 조성 사업 등은 제외되었다. 이는 블루카본(Blue Carbon) 정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서인데, 우리나라 블루카본 정책은 오션뉴딜 정책과 함께 2030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은 큰 차별성을 보인다. 오션뉴딜과 블루카본은 연안의 탄소흡수와 해양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취지와 목표가 비슷하지만, 정책 추진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션뉴딜 정책은 지역에서 바다와 연안의 탄소저감 아이디어를 만들어 제출하는 지역 맞춤형 선정 공모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신청하는 사업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다. 반면에 갯벌, 염생식물, 잘피 등 자원이 고정된 블루카본 정책은 현재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가 일방적으

2. 선행연구의 고찰과 차별성

우선 본 연구가 다루는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국내에 사례나 문헌 증거가 없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기존 어촌뉴딜, 그린뉴딜, 해양환경 정책평가 등에 관해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오창송, 2020; 진영재·황상규, 2021; 김두원 외, 2022; 박경덕 외, 2022; 최예나·박경순, 2022).

그런데 이들 기존 연구에서 다룬 어촌뉴딜, 그린뉴딜 등의 정책 추진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지방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적고 정책의 시작과 추진 단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분야별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나 소통이 적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안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우양호, 2008; Armstrong, 2022; Merk, et. al, 2022; Friess, & Yaakub, 2023). 특히 지방정부와 주민이 정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오션뉴딜 정책 성공의 핵심이 된다.

학계와 정부도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2022년 정책의 입안 시에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방식을 명시하였다. 처음부터 지역 밀착형, 지역주도형을 표방한 것은 과거 국가의 영향이 컸던 어촌뉴딜, 그린뉴딜 사업의 교훈과 개선사항을 참고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 오션뉴딜 정책과 시범사업은 연안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통해 탄소흡수를 높이려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본 연구가 가진 차별적 의미는 지방과의 협력이나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큰 틀을 장기적으로 미리 고민해 둬야 한다는 탐색적 문제제기이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왜(Why)'보다는 '어떻게(How)'의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 아직 모두에게 생소하고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인 오션뉴딜 의제에 대해서 본 연구는 올바른 추진방식과 성과를 점검해 보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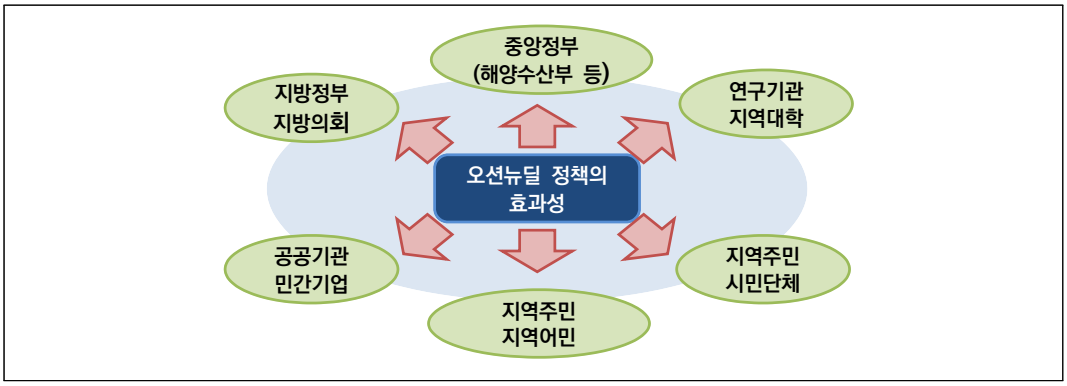
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블루카본 정책은 아직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의 역할 및 존재감이 거의 없는 초기 실험과 연구 단계이다. 또한 정책 대상지역에서도 오션뉴딜은 전국 연안이지만, 블루카본은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정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 등에 대하여 갯벌 복원, 염생식물 식생, 잘피 복원 등의 블루카본 실험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블루카본 해양생물의 종류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인식 높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3.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이론과 방법

1) 오션뉴딜의 효과성과 이해관계자

'오션뉴딜'이라는 정책의 고유한 특성은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지향,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조로 설명된다. 기존의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Multi-level Governance),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Collaborative Governance) 등에 의하면, 오션뉴딜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이해관계자로 정의되는 지역주민은 실제 현장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해줘야 한다(정정길·이시원, 2023; 안종범, 2023; 박홍윤·박규동, 2023). 그리고 어민과 어촌계 등의 전통적 지역사회 공동체는 정책의 현장 집행에 협조하고, 지역의 해양생태 보호 의무와 정책사업의 일부까지 떠맡아야 한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집단은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내의 근거자료 확보와 탄소흡수형 연안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은 자문과 기술적 지원도 계속해야 한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사회적 공헌과 공식후원 등의 방식으로 오션뉴딜 거버넌스 구조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Calvyn, 2015; Macreadie, et. al, 2021; Armstrong, 2022).

〈그림 1〉 오션뉴딜 정책의 효과성과 다층적 이해관계자의 구조



결과적으로 오션뉴딜 정책의 추진과정과 효과성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어민, 전문가 등이 서로 연결된 협력적 로컬거버넌스가 규범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환경정책이 가진 기본 속성, 과학적 검증과 명분의 불안정성, 지역의 공감, 주민 수용성의 불확실성이 뒤섞여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즉 중앙과 지방,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서로 협업해야만 정책 효과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거

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에서는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거버넌스 체계의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이들의 입장과 시각도 분석하여 향후에 오션뉴딜의 효과적인 추진방식을 중점적으로 제언해 보려 한다.

2) 정책 효과성의 정의 및 연구방법

정책의 효과(Effects)는 정책목표에서 제시한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의 변화를 의미한다.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곧 효과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정의할 수 있다(정정길·이시원, 2023; 안종범, 2023; 박홍윤·박규동, 2023). 그래서 본 연구의 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당초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혹은 목표 달성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가 다루는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사업의 정책목표는 규범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측면에서 오션뉴딜 정책의 효과성은 우리나라 해양·연안 공간을 활용한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고 실험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오션뉴딜의 세부적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상향식 계획을 공모에 내서 사업비를 수주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어촌뉴딜, 그린뉴딜, 해양환경 정책평가의 효과성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오창송, 2020; 진영재·황상규, 2021; 김두원 외, 2022; 박경덕 외, 2022; 최예나·박경순, 2022).

둘째, 지역적 측면에서 오션뉴딜 정책의 효과성은 국가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연안 지방자치단체의 문제해결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있다. 즉 연안과 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기반과 협업체계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와 주민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포용성 등 제고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오션뉴딜 정책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를 전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도 제시한다(진영재·황상규, 2021; 김두원 외, 2022).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 오션뉴딜 정책의 효과성은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녹색 복원'을 중·장기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녹색전환의 선도성과 파급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즉 연안의 친환경 선박, 해양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는 목표로 정의된다(박경덕 외, 2022; 최예나·박경순, 2022).

〈표 1〉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과 연구방법

구분	평가기준(목표달성)	세부 기준(세부 목표 달성)
국가적 측면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사업 발굴의 참신성 •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 온실가스 감축·배출 저감 효과
지역적 측면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참여도와 호응도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환경적 측면	녹색 복원의 촉진	•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 해양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 지역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연구방법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 + 설문조사(Survey)	

이상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시범사업의 정책목표는 〈표 2〉와 같이 정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런 목표의 달성도를 통해 사업 참여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정책 효과성 및 성과요인, 정책 한계점 및 제약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공공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보는 것은 정책 대상집단의 수요와 관점에 관심을 두고 변화된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책평가 연구들이 효과성을 평가할 때 동의한 공통의 준거이다. 특히 정책의 실험대로 이용되는 초기 시범사업의 효과성은 광의의 효과성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효과성을 우선시한다(우양호, 2009; 정정길·이시원, 2023; 안종범, 2023; 박홍윤·박규동, 2023). 그러므로 정책대상 집단의 인식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효과성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과 연구방법은 〈표〉와 같다.[3)]

3) 본 연구는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에 대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통합 방식으로 혼합연구 방법론(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혼합연구 방법론으로서 사례연구(Case Study)와 설문조사(Survey)는 서로 보완적인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사례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왜(Why)'와 '어떻게(How)'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풍부한 질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시범사업 지역이 처한 복잡한 환경과 상황적 요인을 있는 그대로 탐구할 수 있으며, 기존 선행연구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기에 유리하다. 반면에 설문조사(Survey)는 표준화된 문항을 사용하여 주관적 편향을 줄이고,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표본 추출을 통해 오션뉴딜 이해관계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수치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관성과 효율성이 높다. 이런 장점을 결합하여, 혼합연구 방법이 오션뉴딜 정책 효과성 연구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사례

1.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사례

옹진군 관할해역은 매년 서울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육상쓰레기 및 중국 쪽 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그리고 어업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옹진군 연안해역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해양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옹진군에서 기존 해양쓰레기 수거는 인력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만 지엽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선박이나 공공노무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켜 쓰레기를 수거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나 위험한 해안절벽 지역 등에서는 수거작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 험난한 지형에서는 작업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해양쓰레기가 분포하는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옹진군 섬 지역의 어촌과 어민의 어업활동에서도 폐어구, 폐어망 등의 어업폐기물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어민의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민 스스로가 치워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생계형 어민의 의식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어업쓰레기가 공공예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처리량은 매년 증가했지만, 수거작업의 애로점과 육상에서의 사후 처리에는 난관이 커졌다. 해마다 연간 수거하는 옹진군 해양쓰레기의 양은 약 2천 톤 이상으로 많았다. 2020년 전후까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들어가는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의 예산 규모는 약 30억 원 이상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의 해양환경 관리는 투입 대비 결과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매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쓰레기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개선의 가시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는 매 5년 단위로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을 만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인천광역시와 옹진군 연안은 해양오염도가 인구가 많은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 연안보다 더 높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옹진군의 해양폐기물 처리량은 평균적으로 매년 20%씩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초자치단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중앙정부의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에 주목했고, 함께 응모하여 시범사업의 유치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 원 수준으로 국비로는 49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 연안 해양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뛰어든 옹진군의 모델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구축'이었다. 옹진군의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모델이 치열한 공모 경쟁을 뚫고,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우선 한강 수계로부터 생긴 쓰레기가 옹진군 연안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옹진군 사업이 선정된 주된 배경이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서 한강을 거쳐 연안해역으로 흘러나오는 쓰레기의 양은 막대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은 행정 관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천과 옹진군이 거의 부담하고 있었다. 옹진군 관할수역인 한강 하구로 나오는 막대한 쓰레기 수거는 오롯이 섬 주민과 지역사회의 몫이었다. 이와 더불어 연간 2천 톤 수준의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다시 육지에 반출·처리하는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인 옹진군이 부담했다.

이른바 해양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이 깨진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만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중앙정부에게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 이에 중앙정부의 오션뉴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옹진군의 주장은 크게 작용했다. 수도권의 해양관문이자, 주요 어업 지역인 옹진군은 해양 및 연안 공간을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사업이 필요한 사유와 당위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비 확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광역시 연안 전체에 과학적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해양쓰레기 저감은 곧 연안과 바다의 탄소흡수력을 증가시킨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많다는 점도 중앙정부와 전문가의 공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옹진군의 오션뉴딜은 국비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4)]

옹진군의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사업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으로부터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유형과 경로추적을 처음 시작한다. 그리고 쓰레기의 최종적인 종착지 및 전체적인 바다쓰레기 분포도 등을 데이터 수집을 통해 구축한다. 이런 모든 데이터는 인공위성과 드론, 해저 음파탐지 장비 등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수집된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으로 최종 전송된다. 이러한 스마트 첨단시스템을 위한 세부적인 기술실증 사업은 4가지 분야 및 단계로 나뉜다. 이를테면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위성과 드론(Drone) 기반 해양환경 영상 관측 체계의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과 지도(Map) 제작, 해양쓰레기 예측 플랫폼 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최종적으로는 해양쓰레기 오염원별 위해도 분석과 탄소저감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각 단계는 인천광역시 항공과 및 옹진군이 서로 협업하는 주무기관으로

4) 이미 과학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햇빛을 차단하여, 탄소를 빨아들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염생식물 등의 광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햇빛의 분해작용에 의해 온실가스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오염은 곧 바다의 탄소흡수를 저해하고, 탄소중립에 위협요인임이 증명되어 있다.

서의 역할을 했다(인천광역시 옹진군, 2025; 해양환경공단, 2025).

옹진군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당초 주민의 참여와 공공인력에만 의지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아가 옹진군은 보다 획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성과를 창출했다. 옹진군의 시범사업에서 보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이 모델을 전국 연안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에 대한 '선 교육'을 통한 '후 도입' 체계를 갖추고, 해양쓰레기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 육성하고 있다(인천광역시 옹진군, 2025; 환경부, 2025; 해양환경공단, 2025). 따라서 옹진군의 시범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첨단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노력이 결합해서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된다.

2. 전라북도 고창군의 사례

고창군(高敞郡) 구시포는 1800년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전형적인 재래식 어촌포구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염전과 재래식 어항은 없어지고, 외지인들이 서해안의 석양을 즐기는 관광지가 되었다. 서해 특유의 조석간만으로 바닷물이 빠지면 백사장이 단단해져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으며, 울창한 솔숲에 야영을 할 수도 있어 꾸준한 방문객이 있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고창-담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들었을 정도로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고창의 구시포는 '와인글라스(Wine-Glass)'라는 별칭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탄소흡수형 오션뉴딜을 위한 연안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입지 조건이 우수한 편이었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통해 연안지역을 발전시켜온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면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었다. 고창군 동호항을 시작으로 죽도항, 광승항, 고리포항, 상포권역(상포·반월·후포) 등에 차례로 어촌뉴딜 국비사업을 유치하였다. 고창군 연안 4곳은 이미 지역맞춤형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재생과 발전의 기틀을 닦았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중앙의 국비사업 수주와 실행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지원도 적지 않았다(전라북도 고창군, 2025; 해양수산부, 2025; 환경부, 2025).

고창군이 이렇게 많은 어촌뉴딜 사업을 유치한 비결을 살펴보자면, 각 어촌과 연안의 지역맞춤형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등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창군 담당 부서와 공무원, 어민과 지역주민 등의 지역사회 구성원도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어촌뉴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창군은 국가어항인 구시포항을 내세워 새로운 오션뉴딜에 도전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고창군은 구시포항 인근을 '해양형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계획하였다. 기존의 어촌뉴딜과 연안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라북도의 해양환경 관련 사업과도 긴밀히 연계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고창군 구시포가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구시포에 조성되는 '탄소중립 해양마을', 청정뉴딜 인프라가 연안 주민과 외지관광객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전국에 수많은 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영감과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중앙정부는 판단하였고, 전라북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고창군의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 구시포항의 오션뉴딜 사업은 '청정(Keep Clean), 블루하버 구시포'로 불린다. 고창군 오션뉴딜 사업의 골자는 연안과 항구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인프라 구축이었다. 이는 '연안항구의 탄소청정 선도모델'로 정의되었다. 고창군은 우선 구시포 연안에 전기 추진선박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 시설을 마련하였다. 전기선박 충전소의 경우 해상풍력을 이용한 유지보수선과 해상풍력 관광유람선이 주된 대상이었다. 항구 인근에는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 등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를 몰고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시포 배후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대대적으로 구축되었고, 노후한 전력설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구시포 해양감시시스템 등 해양환경관리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실제로 구시포항 주변에 해양수질 자동측정시스템과 감시시스템(CCTV)은 곳곳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블루인프라 구축의 기술적 지원은 국가전문기관이 맡았다. 2022년에 고창군은 해양환경공단과 구시포 오션뉴딜 사업수행을 위한 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해양환경공단은 구시포 블루인프라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시설물 공사감독을 맡았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항구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 과정의 전반에는 시범사업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주민 사이에서 장기간 협업한 결과는 구시포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창군 오션뉴딜은 구시포항을 거점으로 탄소흡수기능을 갖춘 기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모델이었다. 고창군은 구시포를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청정어항으로 육성한다는 오션뉴딜 계획을 당시에 제안했다. 세부 사업은 블루에너지 분야와 해양체험지킴이 분야로 각각 나뉘었다. 고창군은 구시포를 우리나라 중부권 연안을 대표하는 해양의 녹색전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당시 정부와 전문가의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녹색전환과 청정어항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었다.

고창군은 오션뉴딜을 통하여 구시포를 외지관광객이 휴식과 힐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 계획도 함께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오션뉴딜을 통해 구시포 인근의 탄소제로 족욕체험장, 청정해수탕을 특화하여 해양체험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빠르게 진행하였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구시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도 도입했다. 예컨대, 구시포해수욕장에 야간 이색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고창 밤바다'의 낭만을 극대화하였다. 노을대교, 명사십리 국가지질공원을 연계한 오션뉴딜 사업의 시너지효과도 도모했다. 오션뉴딜의 모든 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 원 수준으로 국비로는 약 48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이었지만, 실제 지방비 사업 규모는 더 크게 확장된 것이었다(전라북도 고창군, 2025).

결과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고창군은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는 동일했지만, 각자 특화된 유형은 크게 달랐다. 옹진군 사례와 달리, 고창군의 구시포 모델은 청정해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오션뉴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연안과 어촌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편의시설 구축을 통해 관광객과 외지방문객 유치를 도모하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탄소 감축'과 '관광 활성화'의 고창군의 오션뉴딜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사례분석보다 더 정확한 정책 효과성의 평가는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Ⅳ.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효과성

1. 조사 및 자료의 특성

앞선 이론적 논의와 같이 정책의 초기 시범사업에서 가늠하는 효과성은 곧 정책목표(Policy Goals) 달성 정도의 효과성이다. 이는 정책의 질과 영향력, 사업이 당초에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지역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양적 수준의 경제성이나 비용 효율성은 아니며, 오히려 정책대상이나 이해관계자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의 개념이었다(김명수, 2008; 이삼열·정의룡, 2009; 양혜원, 2011; 강신욱, 2017; 정정길·이시원, 2023; 안종범,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효과성의 잣대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에 관한 설문지 평가 조사에 적용하였다.[5)]

시범사업의 효과성은 사업에 실제 참여한 지역 현장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취지와 정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며, 다년간 현장에서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하거나 깊이 관여했던 공무원, 협력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표 2〉 오션뉴딜 평가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CFA)과 신뢰도

평가기준(목표)	초기 항목	최종 항목	GFI	AGFI	RMSR	NFI	x^2	p	Cronbach's α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사업 발굴의 참신성	2	2	0.967	0.952	0.021	0.957	5.434	0.023	0.9034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2	2	0.943	0.931	0.025	0.962	7.073	0.019	0.8583
온실가스 감축·배출 저감 효과	2	2	0.935	0.925	0.038	0.943	5.482	0.052	0.8425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	2	2	0.919	0.903	0.027	0.951	6.025	0.018	0.8312
지역사회의 참여도와 호응도	2	2	0.922	0.909	0.023	0.955	6.217	0.032	0.8909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2	2	0.921	0.912	0.024	0.973	8.411	0.014	0.8967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2	2	0.910	0.906	0.013	0.918	6.530	0.044	0.8761
해양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2	2	0.929	0.916	0.032	0.936	6.355	0.042	0.8043
지역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2	2	0.938	0.919	0.045	0.926	5.476	0.062	0.8591

본 연구는 지역맞춤형 오션뉴딜의 정책목표와 기준을 측정하였으나, 이것이 추상적 연구개념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가를 우선 검증하였다. 이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 변수를 의미 있게 요약하고, 하위개념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였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오션뉴딜의 정책 설문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한 결과이다. 정책목표와 기준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은 GFI값, RMSR값, NFI값, p값≥0.05) 등에서 그 기준이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학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수로서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약 0.9034~0.8043 사이로 나타났다.

5) 조사방법론의 표본오차 및 응답오차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로 한정된 표본의 대표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전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측면에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직 생소한 오션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정보와 이해도 측면에서 일반 주민은 표본오차(Sampling Error) 및 응답오차(Response Error)의 오류가 발생한다. 2022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처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 협력 공공기관, 전문가 등을 이해관계자로 해서 '지역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오션뉴딜의 정확한 정보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업추진협의체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로 표본을 엄격히 한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표본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옹진군, 고창군 시범사업 지역의 오션뉴딜에 실제 관여한 관계자를 한 명씩 만나서 스노우볼링(Snow-Bowling) 방식으로 찾아냈다. 약 4년 정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업 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정책 효과성 평가와 순위

본 연구는 앞서 제시했던 효과성의 이론적 기준에 따라, 인천 옹진군과 전북 고창군의 오션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이해관계자 총 204명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등간비율척도 점수로 평가하도록 했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에 참여한 핵심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주민, 전문가들이 응답한 효과성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6)]

첫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 효과성의 전체 평균을 보면 옹진군의 경우, 효과성 전체 평균은 3.71로 나타나 보통 수준(3.0)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고창군의 효과성 전체 평균은 3.56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개별지표 역시 모두 보통 수준(3.0)을 크게 넘고 있었다. 오션뉴딜 시범사업 전체의 효과성 평균도 3.68로 나타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에 따른 각 세부 항목별 효과성도 모두 보통 수준(3.0)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민·학·연에 걸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응답한 옹진군과 고창군의 오션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성은 있다고 판단되었다.

〈표 3〉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

평가기준(목표)	세부 기준(목표 달성)	옹진군	고창군	효과성 (항목별)	효과성 순위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사업 발굴의 참신성	4.19	4.08	4.13	1
	•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3.91	3.54	3.72	3
	• 온실가스 감축·배출 저감 효과	3.46	3.28	3.39	7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	3.57	3.60	3.59	4
	• 지역사회의 참여도와 호응도	3.10	3.08	3.09	9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3.32	3.01	3.16	8
녹색 복원의 촉진	•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3.62	3.19	3.40	6
	• 해양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3.27	3.89	3.58	5
	• 지역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3.96	3.68	3.82	2
전체		3.71	3.56	3.68	-

* 주: Likert-Type 5점 척도의 평균 응답값임(시범사업 이해관계자, N=204).

6) 본 연구는 오션뉴딜 시범사업 추진협의체에 깊이 관여했던 인천 옹진군(N=106)과 전북 고창군(N=98)의 이해관계자를 각각 선별하고 명부를 만들어 조사하여, 표본오차와 측정오차를 방지하고자 했다. 사전에 선별된 표본은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 39명, 주민대표자 및 주민참여자 총 98명, 외부 협력기관 관계자 총 43명, 현장자문단 전문가 총 24명 등에 대해서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조사했다. 각 효과성 지표는 2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질문방식은 크게 개별 효과성 지표마다 내용의 적절성 정도, 목표 달성의 정도를 각각 정량적으로 질문했다. 척도는 각 항목의 효과성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적극 긍정)'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적극 부정)'는 1점의 양극단으로 구성된 Likert-Type 5점 등간비율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에 소요한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이었다.

둘째, 개별지표로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가장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사업 발굴의 참신성'으로 옹진군과 고창군 모두 평균이 4.0 수준을 상회하였다. 효과성 전체 평균도 4.13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과 자원, 자연조건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 맞춤형 사업 발굴과 상향식(Bottom-Up) 정책기획 및 공모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존 탄소중립 국책사업이 대부분 하향식(Top-Down)인데, 이보다 상향식이 효과성 측면에서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체감도 역시 지역맞춤형 오션뉴딜 방식이 나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가장 효과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평균이 3.1 내외의 수준을 보인 '지역사회의 참여도와 호응도'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표였다. 이를 해석하면, 오션뉴딜의 주민 참여도와 일자리 창출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뜻한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 예산 시범사업이라는 점과 일반인에게 생소한 오션뉴딜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한정된 시범사업 기간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낮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확대 과정에서 정부가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이 가진 거시적 정책목표를 통해 판단해 보자면,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이라는 순서로 평균이 높았다. 이를 해석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일단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이라는 성과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지만, 짧은 시범사업 기간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납득이 가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으로서 옹진군의 경우에는 녹색 복원의 촉진이 가장 높은 효과성 평균을 보인 데 반해, 고창군은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에서 가장 높은 효과성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이 지역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것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모델에 따라서 오션뉴딜 사업의 효과성이 크게 달라지며, 국가주도형 보다는 지역 밀착형 정책방식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대목으로 보인다.

3. 정책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차이

오션뉴딜 정책의 목표와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차이검증(F-test)을 통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무원, 전문가, 주민으로 집단을 나누었으며, 이해관계자 집단의 입장에

서 정책 효과성을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의 목표와 기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향후 정책이 세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응답 결과의 평균은 이해관계자가 인식하는 효과성 정도가 되므로 비교해 볼 가치가 있으며, 나아가 정책적 효과도 이런 결과로 인해 부분적으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옹진군과 고창군의 지역별 평균 응답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에 대한 정책 효과성 기준의 각 세부 항목은 서로 뚜렷한 평균 차이를 보여주었다. 오션뉴딜에 대한 9가지의 정책 효과성 기준의 각 세부 항목 중에서 8가지가 평균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 기준 세부 항목은 대부분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해관계자별로 큰 항목으로는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이 F=8.748,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사업 발굴의 참신성가 F=4.971,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이 F=4.375로 나타났다(유의확률 P<0.001). 그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F=3.288,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은 F=2.689, 온실가스 감축·배출 저감 효과은 F=2.249, 지역사회의 참여도와 호응도는 F=2.011로 각각 나타났다(유의확률 P<0.05).

〈표 4〉 오션뉴딜 이해 관계자의 응답 평균 차이 분석

구분		M	S	F	P	구분		M	S	F	P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의 참신성	공무원	2.8897	1.0083	4.972	.000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공무원	3.4432	1.1961	8.745	.000
	전문가	2.9379	1.2064				전문가	3.6472	1.1826		
	주민	3.3255	1.1766				주민	3.3663	1.1965		
온실가스 감축·배출 저감 효과	공무원	3.2014	1.3835	2.249	.045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	공무원	3.5292	1.2065	2.689	.041
	전문가	2.7463	1.2122				전문가	3.3510	1.3352		
	주민	2.8548	1.1392				주민	3.5862	1.1372		
지역사회의 참여도와 호응도	공무원	3.0135	1.1092	2.011	.048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공무원	3.9983	0.9753	3.288	.015
	전문가	2.9131	1.2823				전문가	3.8954	1.0157		
	주민	2.6338	1.2551				주민	3.7278	0.8218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공무원	3.0987	1.1405	4.375	.000	지역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공무원	3.0046	1.1218	4.178	.001
	전문가	2.4073	1.2582				전문가	2.9505	1.2363		
	주민	2.5384	1.1213				주민	2.8901	1.0585		

* “해양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항목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p>0.5)
* 지역별 평균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p>0.5)

이해관계자 집단의 입장에서 정책 효과성을 보는 시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공무원의 평균이 높으며, 주민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무원과 주민의 차이는 정책적 이해도나 관심의 차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오션뉴딜 사업 발굴의 참신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에서는 주민의 평균도 높았다. 즉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성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 되는 경우에 호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효과성은 분명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존재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 지역의 주민의 평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일수록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당초 의도되었던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한계점

앞서 논의한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 혹은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각각 정리해 보는 것은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향후 정책 확대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에서 좋았던 점은 확대시키고, 그렇지 못한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옹진군과 고창군의 사례분석 및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과 실험'이라는 규범적 목표에 대하여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사업 발굴의 참신성, 해양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의 우수성, 온실가스 감축·배출 저감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 해양·수산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초기에 과학적 검증, 현장 실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션뉴딜 시범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옹진군의 경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이는 해양오염방지 스마트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한국형 해양환경 관리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고창군의 경우, 청정한 어항과 전통포구의 특징을 살려 지역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확산 모델로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냈다.

둘째,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인 효과성이 있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참여도과 호응도,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성이 파악되었다. 오션뉴딜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사업이며, 지역사회 주도의 협업체계 구축을 전제하였다.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선정 기준에서도 지역사회 참여와 주민 동의의 비중이 컸다. 그래서 시범사업 시작부터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사업추진협의체를 만들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추진협의체의 구성원들은 다년간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의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 시범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호응도와 참여도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한계점과 제약요인에 포함된다.

셋째, '지방의 녹색 복원의 촉진'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해양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목표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쓰레기 스마트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옹진군은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지역 해양환경 개선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청정해양과 항구의 연안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연안의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시범사업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옹진군 해양쓰레기 스마트 관리와 고창군 청정포구 재생에너지가 서로 너무 차별화되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실행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한계점과 제약요인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미리 예기치 못한 요소들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막히거나, 효과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은 상존한다. 이는 사업대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국 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오션뉴딜 정책의 확대에 앞서 사전 조치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과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큰 제약요인으로 판단된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은 일단 국비가 70% 수준에서 지원되었다. 지방비를 약 30% 수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재정의 구조가 튼튼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다(우양호·강성철, 2006).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의 대응분담 방식은 앞으로 정책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책사업에서 지방비 대응분담 적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예방 등의 취지를 갖는다. 국비와 지방비 대응 분담은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국가 탄소저감과 환경정책의 속성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높은 지방비 분담은 더 많은 오션뉴딜 사업유치와 추진 동기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의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연안과 어촌지역의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 연안과 어촌의 인구가 지속적 감소하고, 동시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옹진군과 고창군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와 어민대표의 나이가 많았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 두 지역의 65세 이상 주민 비율은 평균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정책의 취지에서부터 내용, 과정, 결과 전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홍보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에는 당초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었지만, 시범사업 현장에서 그 효과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오션뉴딜은 사업범위가 아직 제한적이지만, 시범사업의 경험에 따르면 그 내용 자체가 주민에게는 여전히 생소하다. 향후 오션뉴딜 사업을 통해 정부는 지역환경의 개선, 외지인 방문, 소득 증대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연안과 어촌에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는 새로운 방안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V. 결론과 제언

연구 결과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이 가진 주요 정책목표는 지방 중심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범사업을 수행한 옹진군과 고창군의 사례분석과 조사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지방의 탄소중립 문제해결력 배양에서도 부분적으로 효과성이 있었다. 지역별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주제와 방식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저감의 취지와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은 입증되었다. 다만 앞으로 남겨진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숙제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전국 연안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준거점(Benchmark)'으로서의 단계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 제약 및 지원의 문제이다. 현재 국비를 70% 수준에서만 연도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현행방식은 중앙정부의 다른 연안정비 정책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아니라, 탄소중립 환경정책의 유형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에서는 국비의 상한적 배분이 정책 확산과 성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즉 시범사업에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부담한 30%의 지방비는 지방 입장에서는 꽤 부담되는 수준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션뉴딜 사업의 국비예산에는 지방의 열악한 재원 조달 여건이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가능하다. 향후 국가가 오션뉴딜 정책을 전국 연안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을 약 8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지방비 분담을 2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민 수용성 저하 및 해소의 문제이다. 옹진군과 고창군 주민은 대도시의 평균 연령보

다 상당히 높았으며, 지역 인구도 장기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는 다른 연안과 어촌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정책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가장 큰 환경적 제약요인이다. 5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이 부족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나 관심 부족과도 연결된다. 특히 오션뉴딜의 성과지표인 주민의 호응도와 참여도, 일자리 창출, 협업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시·구'보다는 인구가 적고 어촌마을을 가진 '군'이 대부분 오션뉴딜 사업추진에 유리하다. 물론 군 지역의 연안과 어촌마을 주민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고령인구가 많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오션뉴딜에 대한 인식 저변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기존 오션뉴딜 시범사업이 던져준 교훈이었다. 따라서 이런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주민역량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은 상당히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 주도형 환경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션뉴딜은 정책의 속성상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담보로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국가가 이를 지방에 강제로 분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시간에 부실한 계획을 마련하거나, 주민의 형식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관행을 철저하게 지양해야 한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중앙의 지원사업인 관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나 국비 확보를 위해 오션뉴딜이 지방정치의 치적 쌓기로 이용되는 것도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 생각된다.

넷째,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앞선 분석에서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호응도는 효과성이 가장 낮은 지표로 평가되었다. 이는 시범사업 관계자와 참여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한계점이기도 했다.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가시적 혜택은 많지 않다. 게다가 해양과 연안이 탄소를 흡수하도록 우리 지역이 공헌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모델은 앞으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신욱. (2017).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정책」, 24(1): 213-237.

김두원 외. (202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권과 블루카본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연구」, 34(4): 277-292.

김명수. (2008). 정책평가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효과평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2): 13-42.

박경덕 외. (2022). 비식생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 산정 및 영향인자 분석. 「한국환경과학회지」, 31(9): 767-779.

박홍윤·박규동. (2023).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서울: 대영문화사.

안종범. (2023).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서울: 렛츠북.

양혜원. (2011).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45(1): 23-49.

오창송. (2020). 지역 재생 사업으로서 어촌뉴딜 300 사업 계획과 절차적 과제. 「한국도서연구」, 32(2): 89-112.

우양호. (2008).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과 실패요인. 「행정논총」, 46(3): 173-205.

우양호. (2009).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성장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21(3): 915-939.

우양호. (2009). 행정서비스 고객불만족 차원과 요인 검증: 만족 차원과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3(1): 273-297.

우양호. (2019). 마을공동체의 진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복. 「항도부산」, 17(1): 393-418.

우양호·강성철. (2006). 지방정부간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의 성공조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 77-101.

이삼열·정의룡. (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47(4): 279-305.

정정길·이시원. (2023). 「정책학 원론(제4판)」. 서울: 대명출판사.

진영재·황상규. (2021). 어촌뉴딜사업 정책성과 창출 및 확산 전략 탐색. 「해양관광학연구」, 14(2): 9-33.

최예나·박경순. (2022). 정책요인이 그린뉴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2): 1-33.

해양수산부. (2023).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해양수산부. (2024). 「지역 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 공고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5). 현장 조사 자료 및 홈페이지(https://www.ongjin.go.kr).

전라북도 고창군. (2025). 현장 조사 자료 및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

해양수산부. (2025). http://www.motie.go.kr.
해양환경공단. (2025). https://www.koem.or.kr.
환경부. (2025). http://me.go.kr.
IPCC. (2025).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https://www.ipcc.ch).
Armstrong, C. (2022). *A Blue New Deal: Why We Need a New Politics for the Ocean.* Yale University Press: 1-98.
Ayostina, I., Napitupulu, L., Robyn, B., Maharani, C. and Murdiyarso, D. (2022). Network Analysis of Blue Carbon Governance Process in Indonesia. *Marine Policy*, 137: 1-15.
Calvyn, F. A. (2015). Potential Blue Carbon from Coastal Ecosystems in the Republic of Korea. *Ocean Science Journal*, 50(1): 1-8.
Dundas, S. J., Levine, A. S. (2020). Integrating Oceans into Climate Policy: Any Green New Deal needs a Splash of Blue. *Conservation Letters*, 13(5): 1-16.
Friess, D. A. and Yaakub, S. M. (2023). Blue Carbon Science, Management and Policy across a Tropical Urban Landscap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30: 104-120.
Macreadie, P. I., Costa, M. D. and Duarte, C. M. (2021). Blue Carbon as a Natural Climate Solution. *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 2(12): 826-839.
Merk, C., Grunau, J., Riekhof, M. C. and Rickels, W. (2022). The Need for Local Governance of Global Commons: The Example of Blue Carbon. *Ecological Economics*, 201: 1-21.
Quevedo, J. M. D., Uchiyama, Y. and Kohsaka, R. (2021). Local Perceptions of Blue Carbon Ecosystem Infrastructures in Panay Island, Philippines. *Coastal Engineering Journal*, 63(3): 227-247.

우 양 호: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총무위원장 및 감사,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외래교수,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부산문화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책과 논문 저술의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및 지방행정, 해양행정, 정책이론 등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120여 편의 논문이 등재되어 있다 (woo8425@kmou.ac.kr).